

《공주민제(DCA) 선언》

— 노동 소멸의 시대, 분산 소유·분산 의결·분산 책임의 블록체인 자율거버넌스로 —

반자반노 이상연

서문: 한 유령이 세계를 배회한다 — 노동의 소멸

한 유령이 세계를 배회한다. 노동의 소멸이라는 유령이다.

정부도, 기업도, 정당도, 노동조합도, 시민단체도 이 유령을 본다. 그러나 대부분은 아직도 그 유령을 “일시적 경기 변동”으로 취급한다. 어떤 이들은 “새 일자리가 생길 것”이라 말하고, 어떤 이들은 “교육을 더 하면 된다”고 말한다. 그러나 유령은 묻지 않는다. 유령은 설명하지 않는다. 유령은 진행한다.

기술은 인간을 생산에서 덜 필요로 만드는 방식으로 진보한다. 이것은 선악의 문제가 아니다. 경쟁의 문제다. 한 기업이 인간 노동을 더 쓰면 비용이 늘고, 다른 기업이 AI로 비용을 줄이면 경쟁은 기울어진다. 기술은 노동을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대체’한다. 그리고 대체된 노동은 되돌아오지 않는다.

이때 문명이 맞닥뜨리는 위기는 실업률이 아니다.

가장 치명적인 위기는 유효수요의 붕괴다. 노동이 줄어 임금이 줄면 소비가 줄고, 소비가 줄면 생산은 목적을 잃는다. 인간이 소비자가 되지 못하면, 기업도 존속할 수 없다. 자본주의는 스스로의 성공(기술 발전)으로 스스로의 조건(소비 기반)을 무너뜨리는 단계에 들어선다.

이 선언은 “일자리 창출”이라는 낡은 주문을 반복하지 않는다.

목표는 다르다. 일자리에서 인간을 해방시키되, 해방이 붕괴로 이어지지 않게 하는 사회 구조를 설계한다.

그 설계의 이름이 공주민제(共株民制), 즉 DCA(Distributed Citizen Assets) 이다.

제1부. 오늘의 세계와 그 필연: 노동 기반 문명의 종언

1) 자본주의의 공(功)과 성공의 역설

자본주의 세계는 혁신과 축적, 위험 감수와 조직화로 생산력을 폭발적으로 확장했다. 기업가와 투자자, 경영자와 기술자, 수많은 노동자와 소비자들이 그 세계를 만들었다. 특히 자본 소유층과 기업 경영층은 기술과 자본을 결합해 인류가 누릴 물질적 기반을 넓혔다. 이 공(功)은 역사적 사실이다. 자본가 계급은 분명히 하나의 문명 창조 계급이었다.

그러나 그 성공이 새 모순을 낳는다. 생산은 인간을 덜 필요로 하고, 경쟁은 노동을 밀어낸다. 더 적은 인간으로 더 많은 생산이 가능해질수록, 다수의 인간은 임금으로 소비자가 되기 어려워진다. 여기서 문명은 정지한다. 생산이 소비를 잃으면 생산은 스스로의 이유를 잃는다.

2) 대립선의 이동: “계급 대립”이 아니라 “무지분 vs 유(有)지분”

낡은 세계는 “노동자 대 자본가”의 구도로 설명되었다. 그러나 노동이 소멸하는 세계에서 핵심 대립선은 이동한다.

지분 접근권을 가진 자: 생산수익(배당·자본이득·의결)에 접근한다.

지분 접근권이 없는 자: 노동이 줄어들수록 생존 기반이 사라지고 소비자가 되기 어렵다.

이 대립은 단지 소득 격차가 아니다. 문명 유지 조건의 격차다.

“무지분 인간”이 대다수가 되는 순간, 시장은 소비자를 잃고, 기업은 매출을 잃고, 국가는 재정 기반을 잃는다. 그때부터 정치와 경제는 동시에 불안정해진다.

3) 전통 국가의 딜레마: 커질수록 포획되고, 줄면 무너진다

전통 국가는 오랫동안 대리체였다.

소유를 대신하고(공공자산·연금·국부), 의결을 대신하고(대표제·관료제), 집행을 대신했다(행정·사법·치안).

그러나 포스트-노동 시대에 국가가 분배를 전담하려 할수록 국가는 커지고, 국가가 커질수록 포획¹⁾ 위험은 커진다. 반대로 국가가 이를 방기하면 사회는 균열되고 소비는 붕괴한다.

따라서 요구되는 것은 국가의 무한 팽창도, 국가의 방기도 아니다. 요구되는 것은 **국가 기능의 재배치와 흡수, 그리고 사회의 자율적 신뢰장치**다.

제2부. 공주민제(DCA)의 원리: 무엇이 바뀌는가

1) 공주민제(DCA)의 정의

****공주민제(共株民制), DCA(Distributed Citizen Assets)****란, 사회 구성원이 기업과 공공자산의 성과에 대해 “세금-복지”로만 연결되는 존재가 아니라, ****지분(주식과 같은 권리)****으로 직접 연결되는 존재가 되는 체제다. 각자가 사회의 핵심 자본(기업·공공자산·데이터·AI 수익 등)에 대해 지분 형태의 권리를 갖는다. 그 지분을 기반으로 배당·의결·책임에 참여함으로써, 노동 이후 문명에서 국민 각자가 생존과 존엄의 기반을 노동소득이 아니라 사회적 지분소득 및 자본 접근권으로 전환하는 체제다.

공주민제의 핵심은 “지분 민주주의”, “분산된 주권”, “분산된 책임”이다.

1) 국가·자본·제도가 특정 집단에 의해 장악되어 공적 기능을 잃는 현상

2) 사회화의 의미 재정의: 결과 평준화가 아니라 “기회자본의 사회화”

공주민제(DCA)는 사적 소유를 부정하지 않는다. 소유 총량의 차이도 인정한다. 혁신의 보상도 부정하지 않는다.

공주민제가 표적으로 삼는 것은 “누가 더 많이 가졌는가”가 아니라 “누가 **아예** 진입하지 못하는가”다.

따라서 공주민제가 말하는 사회화는 다음 한 줄로 요약된다.

누구도 ‘자본 접근권 0’인 상태로 남지 않게 한다.

이것이 **기회자본(opportunity capital)의 사회화**다.

기회자본은 현금이 아니라 권리의 묶음이다.

- 기초 사회지분: 무지분 인간의 제거(0이 아닌 지분권)
- 금융 접근권: 저비용 분산투자·공정한 신용·리스크 분산
- 정보/데이터/교육 접근권: AI 도구와 학습 기회의 보편화
- 시장 접근권: 플랫폼·거래·창업의 공정 진입
- 의결 접근권: 사회자본 운용과 규칙 결정 참여

기회자본이 보편권이 되는 순간, 복지의 대상은 자본의 주체로 바뀐다.

이 변화가 DCA의 핵심이다.

3) 휴만(Humann): 계급을 넘어서는 새 주체

공주민제(DCA)는 “국민/시민” 개념을 폐기하지 않지만, 그것에 갇히지도 않는다. 공주민제(DCA)가 성숙할수록 전통국가는 대리 기능을 줄이고 사회는 자율 기능을 늘린다. 이 과정은 전복이 아니라 **기능적 자연사**다.

그 과정의 주체는 다음을 동시에 수행해야 한다.

- 소유의 주체
- 의결의 주체
- 책임의 주체

이 주체를 ****휴만(Humann)****이라 부른다.

휴만은 특정 계층의 이름이 아니다. 노동자도 휴만이고, 자본가도 휴만이다. 계급 구분을 흐리면서 새로운 책임 구조를 받아들이는 **문명 주체**이다.

휴만은 “통치받는 존재”가 아니라 “자율적으로 소유·의결·책임지는 존재”다.

제3부. 이 선언은 누구의 적이 아닌가: 자본가도

휴만이다

공주민제(DCA)를 향해 가장 먼저 던져질 질문이 있다.

“이것은 자본가에 대한 공격인가?”

대답은 분명하다. 공주민제(DCA)는 **적을 만들기 위한 설계가 아니다.**

공주민제(DCA)는 **포스트-노동** 시대에 문명이 붕괴하지 않기 위한 설계다.

따라서 자본가도 휴만의 일원이다.

1) 공의 인정: 혁신의 주체였던 역사

자본 소유층(기업가·투자자·경영자)은 세계의 생산력을 확대해 왔다. 위험을 감수했고, 자본을 축적했고, 혁신을 이끌었다. 공주민제(DCA)는 이 역사적 공(功)을 부정하지 않는다.

2) 책임의 전환: 문명 유지의 과제를 함께 나누지 않으면 모두가 무너진다

그러나 노동이 줄어드는 시대에 시장을 떠받치는 원동력은 새롭게 전환된다.

핵심은 “얼마나 더 생산하느냐”가 아니라 “누가 소비자로 남느냐”다.

- 시민이 소비자로 남아야 기업이 산다.
- 시민이 소비자로 남으려면 지분 접근권이 열려야 한다.
- 지분 접근권이 닫히면 시장은 소비자를 잃고 기업도 무너진다.

따라서 기회자본의 사회화는 “양보”가 아니라 **문명 유지의 투자**다.

자본가가 책임과 지배의 일부를 사회로 분산시키는 것은 처벌이 아니라 **공동의 계승**이다.

대결이 아니라 지속가능성으로의 전환이다.

3) ‘새 최대주주’가 아니라 ‘사회적 균형’이 목표다

공주민제(DCA)가 원하는 것은 특정 집단(국가, 노조, 연금)이 “새 최대주주”가 되는 것이 아니다. 목표는 **분산**이다.

분산 소유, 분산 의결, 분산 책임.

어느 한 손에 운전대를 쥐게 하지 않는 구조가 목표다.

제4부. 실행 경로: 국민 중심 자생적 사회화(몰수 없는 전환)

공주민제(DCA)는 혁명적 물수로 오지 않는다.

기존 제도들의 **연결과 재정렬**로 온다.

민간과 사회, 기업과 공적 장기자본이 맞물릴 때, 지배는 폭력 없이 분산된다.

1) 국민/시민 중심: 장기·분산·규칙 기반 지분축적

공주민제(DCA)의 첫 출발점은 “재테크”가 아니라 **생활규범**이다.

- 장기(Long): 세대 단위
- 분산(Diversified): 특정 기업·직장·산업에 갇히지 않기
- 규칙(Rule-based): 자동 적립·저비용·표준화·투명 공시²⁾

시민의 분산 지분축적이 사회적 습관이 될 때, 인간은 노동 정체성에서 자본 주체 정체성으로 이동한다. 그 이동이 휴만의 탄생 조건이다.

2) 노동조합의 재배치: 계급을 강화하는 조직에서 계급을 흐리는 전환 장치로

노동조합은 중심이 아니다. 중심은 국민이다.

그러나 노동조합은 이미 조직된 집단이다. 따라서 “전환 행동”을 가장 빠르게 시작할 수 있는 도구다.

여기서 핵심 원칙이 있다.

자기 회사 주식에 갇히지 말고, 타 회사·타 산업까지 분산 축적하라.

자사주만의 축적은 직장 단위 이해로 환원되기 쉽다.

타사·타산업까지 분산 축적하는 순간, 직장 단위를 넘어 시민 단위의 자본 연대로 이동한다.

노동자 정체성은 “직장 기반 계급”에서 “사회 기반 휴만”으로 자라난다.

의결권의 목적은 장악이 아니라 **분산지배의 균형**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 노동조합 내부에는 최소한의 헌정 장치가 필요하다.

- 속의(정보 공개, 토론, 근거 제시)
- 감사(재정·의결 기록의 검증)
- 위임의 상한(조직동원의 과잉을 방지)

2) 자동 적립: 개인이 별도의 의사결정이나 복잡한 절차 없이, 일정한 규칙에 따라 소득의 일부가 자동으로 사회적 지분(주식·펀드 등)에 적립되는 구조다. 이는 투기적 투자 대신 생활 습관처럼 지속되는 지분 축적을 목표로 한다.

저비용: 금융기관이나 제도가 제공하는 투자 상품이 수수료·관리비용이 최소화된 형태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비용이 높으면 장기적 축적 효과가 줄어들기 때문에, 사회 전체적으로 접근 가능한 초저비용 구조가 강조된다.

표준화: 지분 축적 방식이 복잡하지 않고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는 규칙으로 설계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예를 들어, 일정 비율 자동 적립, 분산투자, 장기 보유 같은 기본 규칙을 사회적 표준으로 만드는 것이다.

투명 공시: 적립·운용·배당 과정이 공개적으로 검증 가능해야 하며, 시민이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가 투명하게 공시되는 구조를 말한다. 이는 권력이나 자본의 “포획”을 막고, 신뢰 기반의 자율 거버넌스를 가능하게 한다.

· 이해상충 공개(조합·간부·외부세력의 결탁 방지)

노동조합의 휴만화는 ‘자본가 흉내’가 아니다.

계급성을 스스로 소멸시키는 **사회 협력적 전환**이다.

3) 공적·집합적 장기자본

공주민제(DCA)가 요구하는 장기자본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 장기 보유
- 수탁자 책임³⁾
- 투명성(공시·공개감사)
- 시민 분산 소유·의결과의 접속 가능성

연금·공제회·지역기금·협동조합기금·시민 펀드·공공투자기금 등은 “새 최대주주”가 아니라 **분산 지배를 돕는 연결 장치**로 재정의되어야 한다.

4) 기업/자본 소유층의 참여: ‘휴만 전환 프로그램’의 채택

기업과 자본 소유층이 반발만 하면 전환은 충돌로 간다.

기업과 자본 소유층이 휴만 전환의 선도자가 되면 전환은 협력으로 간다.

가능한 실천은 다수 존재한다.

- 직원·시민의 **분산형 지분축적 프로그램**(자사주 편중을 넘어 ‘사회 분산 바스켓’)
- 기술 전환으로 감소하는 노동을 **퇴출이 아니라 휴만 전환(교육·투자·자본접근)**으로 연결
- 장기 배당·성과 공유 규칙 강화
- 지배구조의 투명화(공개감사 가능한 의사결정 프로토콜)

이 실천은 선행이 아니라 **시장 유지**다.

소비자 기반을 살리는 것이 곧 기업 생존 기반이다.

제5부. 블록체인 기반 자율거버넌스: 분산 소유를 분산 의결로 고정하는 헌정 장치

분산 소유는 자동으로 분산 의결이 되지 않는다.

분산된 소유를 의결로 연결하지 못하면, 소유는 다시 포획된다.

따라서 공주민제(DCA)는 **블록체인 기반 자율거버넌스**를 핵심 인프라로 채택한다.

3) 공적 자본을 맡은 기관이 사회 전체의 장기적 이익을 위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용해야 하는 의무를 뜻한다. 투명 공시와 공개 감사와 연결된다. 공주민제(DCA)에서 국민의 분산된 지분과 자율 거버넌스를 뒷받침하는 핵심 원리로, 권력이나 자본의 "포획"을 막고 신뢰 기반을 구축하는 장치이다.

1) 원칙: 중앙정부의 대리 기능을 “프로토콜+감사”로 흡수한다

자율거버넌스는 무정부가 아니다.

자율거버넌스는 **신뢰를 강제하는 폭력**이 아니라 **신뢰를 증명하는 규칙**이다.

핵심 구조는 다음의 결합이다.

- 숙의(Deliberation): 정보·근거·토론
- 위임(Delegation): 유동적 대리(언제든 철회 가능)⁴⁾
- 투표(Voting): 안전별 결정 구조
- 감사(Audit): 모든 결정의 추적 가능성과 검증
- 집행(Execution): 규칙 기반 자동 집행(단, 예외·항소 포함)

2) ‘DAO화’의 핵심은 기술이 아니라 헌정이다

블록체인은 도구다. 도구는 권력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공주민제(DCA)의 자율거버넌스는 다음의 헌정 원칙을 갖는다.

- **공개감사**: 코드·규칙·결정 로그는 검증 가능해야 한다.
- **다중 분산**: 단일 체인·단일 운영자·단일 알고리즘의 독점 금지.
- **포획 방지**: 고래 지분·조직 동원·매수 공작을 억제하는 장치(위임 상한, 시간지연, 이중 승인, 이해상충 공개).
- **사생활 보호**: 투표의 프라이버시는 보호하되, 결과의 정당성은 검증 가능해야 한다(익명성과 검증가능성의 균형).
- **항소·예외 절차**: 자동 집행은 인간적 구제와 재심의 경로를 가져야 한다.
- **리스크 레이어**⁵⁾: 투자·배당·자산운용은 위험관리·편향감시·내부자 부정행위 방지 체계를 내장해야 한다.

3) DCA 인프라의 골격(권리-자산-의결의 연결)

공주민제(DCA)의 사회 시스템은 다음 구성요소를 필요로 한다.

- **시민자산계정(국민지분계좌)**: 사회지분의 보관·이전·상속·락업⁶⁾ 규칙

4) 블록체인 기반 자율거버넌스(DAO)를 통해 위임은 스마트 계약으로 기록되고, 철회는 기술적으로 즉시 반영되며, 모든 과정은 투명하게 공시·검증된다. 유동적 대리(언제든 철회 가능)은 대표제의 한계를 보완하는 새로운 민주적 장치로, 시민이 권한을 위임할 수 있지만, 그 권한은 언제든지 회수할 수 있어, 권력의 고착화와 포획을 방지하고, 분산된 의결·책임 구조를 강화하는 원리다.

5) 레이어는 시스템을 여러 층으로 나누어 각각의 기능을 담당하게 하는 설계 원리를 뜻한다.

권리 계층: 국민지분계좌 같은 기본 권리 구조

자산 계층: 공적 자산·데이터·AI 수익을 관리하는 층

배당·재투자 계층: 수익을 배당하거나 재투자하는 규칙을 다루는 층

의결·숙의 계층: 시민이 토론·위임·투표를 통해 결정하는 층

리스크 관리 계층: 투자·배당·운용 과정에서 위험과 편향을 감시하는 층

분쟁 해결 계층: 규칙 위반이나 갈등을 조정·중재하는 층

이렇게 레이어를 나누면, 권력이나 자본이 특정 집단에 의해 “포획”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각 레이어가 서로 견제·감시하면서 투명성과 신뢰를 유지하는 구조가 된다.

- **사회배당 프로토콜**: 공공자산/데이터/AI 수익의 일정 비율을 규칙에 따라 환류
- **숙의·위임·투표 레이어**: 안건 제안→토론→평가→투표/위임→집행
- **감사·준법 레이어**: 이해상충, 내부자 거래, 편향, 위험노출 상시 점검
- **분쟁조정 레이어**: 온체인 규칙 + 오프체인 조정/법제 연동

이 구조는 국가를 대체하는 새 중앙권력이 아니라, 국가의 대리 기능을 사회로 돌려놓는 **신뢰 인프라**다.

제6부. 대안들의 한계, 그리고 공주민제(DCA)의 차별

1) 분배만으로 버티는 길(소득보조 단독)의 한계

소득보조는 단기 완충이다. 그러나 소유·의결 구조가 그대로이면, 생산-소비의 장기 균형은 불안정하다. 문명은 보조금으로만 유지되지 않는다. 공주민제(DCA)는 분배가 아니라 **권리(지분) 기반 환류**를 구축한다.

2) 강제 국유화·몰수의 길의 한계

강제 사회화는 권력 집중과 자유 침식의 위험을 낳는다. 공주민제(DCA)는 국유화가 아니라 ****국민유화(개인 단위 분산 지분권)****다. 사회화는 “국가의 소유”가 아니라 “국민에게 귀속되는 지분권의 확대”로 구현된다.

3) 소멸주의(인간 배제의 정당화)의 파괴성

인간 없는 생산이 가능해질수록 인간 없는 소비는 시장의 종말이 된다. 공주민제(DCA)는 인간을 배제하지 않고 **자본 시스템의 주체로 편입**시킨다. 포스트-노동 시대의 윤리는 배제가 아니라 편입이다.

- 6) 락업(lock-up)은 사회적 지분을 단기 투기에서 보호하고 장기적 축적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를 뜻한다. 이는 국민이 단순히 배당을 받는 소비자가 아니라, 장기적 자본의 주체(휴만, Humann)로서 참여하도록 만드는 핵심 규칙 중 하나이다. 국민이 받은 사회적 지분을 바로 현금화하지 못하게 하여, 투기적 매매 대신 장기적 축적을 유도. 세대 단위 축적 락업은 단순히 몇 달이 아니라, 세대 단위로 장기 보유하는 구조를 지향한다. → 국민이 받은 기초 지분은 최소 수년~수십 년 동안 묶여 있어야 하며, 이는 사회적 자본을 안정적으로 성장시키는 장치가 된다. 락업 기간, 해제 조건, 상속 규칙 등이 모두 공개되어야 하며, 시민이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어야 신뢰가 유지된다.
- 7) 환류는 공주민제(DCA)에서 생산된 성과가 사회 전체로 되돌아가고, 다시 개인의 지분으로 연결되는 순환 구조를 뜻한다. 이는 단순한 분배가 아니라, 지분 기반의 권리 환류로서 시민을 자본의 주체로 만드는 핵심 원리이다.

제7부. 국가의 기능적 자연사: 파괴가 아니라 흡수

공주민제(DCA)는 국가를 전복하지 않는다. 국가가 수행하던 대리 기능을 사회가 흡수한다.

- 소유의 대리 → 분산 소유(시민자산계정, 사회지분)
- 의결의 대리 → 분산 의결(블록체인 자율거버넌스)
- 집행의 대리 → 공개감사 가능한 규칙 기반 집행

국가는 폭력적으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플랫폼화되고, 플랫폼 기능마저 사회 네트워크로 흡수되어 “필요 없어지는 방식”으로 자연사한다.

질서는 사라지지 않는다. 질서는 **신뢰 구조**로 재구성된다.

제8부. 전환 강령: 조직별 즉각 과제

공주민제(DCA)는 국민이 중심이며 조직은 도구다. 각 주체의 과제는 다음과 같다.

1) 정당에게

****기회자본 기본권(자본 접근권)****을 헌정 의제로 상향

공공자산·데이터·AI 수익의 일부를 DCA 사회지분으로 환류하는 원칙 수립

공적·집합적 장기자본의 수탁자 책임·투명성·정치적 남용 방지 장치 강화

지방/공공 영역에서 숙의+위임+감사의 분산 의결 실험을 제도화

2) 시민단체에게

장기·분산·저비용 지분축적을 “재테크”가 아니라 “문명 생존 규범”으로 교육

투명한 시민 펀드/지역기금 모델 제시(감사·공시·의결 규약 포함)

포획 방지 감시(이해상충·불투명 운용·내부자 위험) 체계 구축

3) 노동조합에게

자사주 중심을 넘어 **타사·타산업 분산 축적**으로 이동(직장 단위 탈피)

의결권 행사는 장악이 아니라 분산지배의 균형을 목표로 설정

내부 숙의·감사·정보공개·위임 상한을 스스로 현정화

“계급 고착”이 아니라 “휴만 전환”의 조직으로 자기정의

4) 기업/자본 소유층에게

혁신의 공을 사회와 투명하게 공유(신뢰 자산 축적)
분산형 지분축적 프로그램 도입(자사주 편중 탈피)
기술 전환의 비용을 퇴출이 아니라 **휴만 전환(교육·투자·자본접근)**으로 연결
공개감사 가능한 거버넌스 프로토콜 채택(지속가능한 시장 기반)

5) 공적·집합적 장기자본 운용기관에게

대리가 아니라 연결이 되기(시민 분산 소유·의결과 접속 가능한 구조)
투자·의결·감사에 대한 공개 보고 강화
새 지배자가 아니라 사회적 균형의 연결 장치로 자리매김

결어: 모든 휴만에게 — 대결이 아니라 승계

공주민제(DCA)는 반(反)자본주의가 아니다. 포스트-노동 시대에 자본주의가 자기모순을 극복하기 위한 체제 재설계다. 자본가의 공은 인정된다. 그러나 문명 유지의 책임은 모두의 공동 몫이다. 지배와 책임의 일부는 사회로 분산되어야 한다. 그 분산은 물수가 아니라 승계다.

휴만(Humann)은 계급의 이름이 아니다.

휴만은 소유·의결·책임을 함께 지는 새 주체다.

공주민제(DCA)는 분산 소유를 분산 의결로 고정하고, 분산 의결을 분산 책임으로 완성하는 사회 시스템이다. 블록체인 기반 자율거버넌스는 그 시스템의 신뢰 인프라다.

부록: 공주민제(DCA) 원리 강령

1. 노동패러다임의 종언은 되돌릴 수 없는 문명 조건이다.
2. 목표는 일자리 창출이 아니라 일자리에서의 해방이다.
3. 사적 소유는 인정되나, 자본 접근권 “Zero”인 인간은 구조적으로 제거되어야 한다.
4. 사회화는 결과 평준화가 아니라 기회자본의 사회화이다.
5. 시민배당은 복지가 아니라 지분 배당이다.
6. 국민이 중심이며, 정당·시민단체·노동조합·기업·공적 자본은 전환의 도구이다.
7. 노동조합은 자사주에 갇히지 않고 타사·타산업 분산 축적을 통해 계급성을 스스로 소멸시켜야 한다.
8. 공적·집합적 장기자본(국민연금 등)은 국가의 도구가 아니라, 분산 소유·분산 의결과 연결되

는 신탁 장치로 재정의되어야 한다.

9. 자본가 계급은 과거의 공을 인정받는 동시에, 지배와 책임의 일부를 사회와 공유하는 휴먼 전환을 선택해야 한다.

10. 분산 소유는 블록체인·DAO 기반 자율거버넌스를 통해 분산 의결로 고정되어야 한다.

11. 자율거버넌스는 공개감사·포획 방지·항소 절차를 갖추어야 한다.

12. 국가는 전복이 아니라 기능 흡수를 통해 질서의 신뢰구조로 재구성된다.

2025.12.3.